

2월

창간준비

6호

혁명

Revolution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 최병승 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아가자!
- 한국판 점령운동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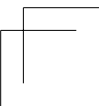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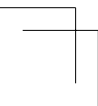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혁 명 6호

창간준비

Revolution

- 발행일 : 2012년 3월 2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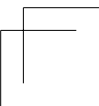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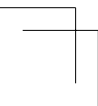


혁명

창간준비
6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 5
- [정치방침]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7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13
- 선거 전술 - 기본 원칙과 방향 19
-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아가자! - 고민택 30
- 한국판 점령운동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부터! - 임천용 39
- 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 최병승 46
-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세계 자동차산업 - 이민수 50
- 시리아 혁명과 아랍의 봄 - 양재훈 57
- 그리스 혁명과 전 유럽 노동자혁명 - 홍수전 67
- [기고] 나꼼수 현상을 통해 바라 본 한국사회 - 아방가르드 72



〈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도 견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판이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 동안 재벌의 친구들이었던 당들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모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빵집, 마트 등 골목상권 진출로 나타난 유통 ‘독점과 횡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 내부 거래 등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폐해’들을 시정하기 위한 자본가 정당들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계급적 한계로 인한 무지의 탓이건 노동자 민중들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잘못 짚은 것이다.

MB 정권에 대한 분노와 달리 이 분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줌의 1% 자본가계급이 99%에게 독재를 행사하는 이런 더럽게 불평등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탈을 쓰고서 1%들이 99%들에게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자유를 거침없이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재벌에 대한 분노가 반MB 정서와 다른 것은 그 분노가 잠재적으로 자본가 독재 체제, 즉 자본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분노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표출되도록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선거와 제도권 틀 안에 가두느라 분주하다.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하고 ‘요건 강

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 공약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자발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희망텐트를 치고 희망뚜벅이를 내딛어도 이들 진보정당들은 못들은 척, 못본 척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극구 회피하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서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의식 확보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부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까지 모든 것을 야권연대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 창간준비 6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2012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대중투쟁의 한 가운데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정세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계급투쟁의 질곡을 풀고자 분투하는 동지들과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혁명**

2012년 2월 29일

[정치방침]

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2012년 정세는 한 마디로 혁명적 계급투쟁의 분출인가,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인가로 요약된다.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 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리고 말 것인가? 이것이 2012년 정세를 가르는 핵심축이다.

1. 2012년 투쟁,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고 말 것인가?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 노동시간 단축/야간 노동 철폐투쟁, 정리하고 저지투쟁, 정규직화 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등록금투쟁, 한미

FTA 반대투쟁 등이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 반 MB 선거심판론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중투쟁을 의회주의로, 제도권 내로 수렴시키려는 데 2012년 사활을 걸 것이다.

투쟁 대안 -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 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의 광장점거와 시위가 조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에 대

한 정면 도전으로 나아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의 의회주의 정당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노동자, 청년들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투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집권한 진보정당, 사민주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 민중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서고 있다. 1% 자본 독재의 현실 앞에서 의회주의의 공상성과 반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답”은 더 이상 선거와 의회가 아니라 대중행동,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급속히 깨우치고 있다.

총파업과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운동,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다양한 ‘희망’ 운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흥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 MB 정서’를 내세워 대세몰이하고 있는 선거 심판론에 대항할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이러한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 대안들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쳐야 한다.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만들어내자.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식! 야간노동 철폐!
-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이러한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 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의 분열 책동을 뚫고 하나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건설하자.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민주대연합/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정세의 중심과제가 놓여 있다.

2.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탈 것인가, 2012년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의 정세 한 가운데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다수의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완전히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아래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진당 지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2012년 정세 전반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투쟁은 관료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확산 여부에 따라 이 투쟁은 2012년 대중투쟁이 ‘반MB 선거심판’으

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2012년 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이자, 위와 같은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시험대이다. 뚫어야 할 2012년 계급투쟁의 제1차 관문인 것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훼손하고 최종 배신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세적 맥락과 의의를 또한 가지고 있다.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배타적 지지’ 철회만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야권연대에 대한 반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반MB 선거심판론이라는 대중투쟁에 대한 봉쇄망을 걷어내는 정세적 과제에 부응하며 반대투쟁을 철저히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다.

‘통진당 지지 철회하면 대안은 무엇이나?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정치방침’ 논의를 선거주의 · 의회주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은 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에 종속시키려 하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그 동안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온 야권연대/야5

당 중재단의 한 축으로 끼어 있는 진보신당 지지에 대해서도 공히 반대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철회의 대안'은 또 다른 선거주의 ·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2012년 선거를 대중투쟁에 종속시키고 반MB 선거심판론을 견어내서 잠재적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이 선거로 막히지 않고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저하고 일관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져드는 의회주의 및 노동운동 양날개 전략과 철저히 선을 긋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 또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복수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열어놓자는 등의,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없다. 그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 · 선거주의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 원인, 즉 자본가 정당에 대한 투항을 가져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다시 또 재생산할 뿐이며, 2012년 투쟁의 최대 장애물인 반MB 선거심판론을 강화하는 데만 일조할 것이다.

일관되고 철저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에서는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이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적 대안으로 가두는 주장과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주최의 선언자대회에서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정치적 사상과 자유가 보장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로 개량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효한 전술"이라고 주장했다.[참세상 보도]

노동조합의 개량화가 '불가피'하므로 혁명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현실적이고, 조합주의에 조용하는 의회주의 제도권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사상과 자유가 보장되어 개량화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조합에 기반하고 있는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한 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여론조사 상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민주노총이 통진당 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박유기 전위원장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애초 민노당 창당도 박유기 전위원장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혁명적 진위정당”이나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거는” 정당 건설에 반대하고, 의회주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노동자 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회피한 채 박유기 전위원장은 ‘도로 민노당’ 수준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노동조합 개량화 불가피’라는 조합주의 논리를 끌어대며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가운데 국회의원 배출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몇 명이나 동의하겠나? 현 시기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전선을 치고 이를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이끌 강령과 전술로 무장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에 반대하고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나올 수 없다.

범죄파 블록으로 왜소화될 것인가,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될 것인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의회주의와 야권연대 반대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만약 이와 같이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 전략의 틀 안에 가두어진다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결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노동조합 상층부 내 범죄파 블록으로 왜곡, 왜소화되면서 반대투쟁의 동력을 급격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에서부터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의회주의 틀 안으로 가두는 근거로 제시된 ‘노동조합의 개량화’는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본에 협조할 때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렇게 해서 관료화되고 교섭기구로 변질된 노동조합을 다시 평조합원들 중심의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했다.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문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반대할 때만이 가

능한 논리이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에 있다. '개량화'는 이 자주성을 잃고 노사협조주의의 길로 빠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사실상 이러한 계급협조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우리가 돌파해야 할 2012년 투쟁의 첫 관문이자 정세의 중심고리이다. **혁명**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걷어내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2012년 1월 25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지금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와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지지하며 2012년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론에 종속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이러한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평조합원 중심의 투쟁조직으로 재편하는 투쟁으로 곧장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평조합원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2012년 총파업도 상층 관료기구에 의한 형식적 결의로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들이 이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세워 민주대연합과 반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1.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선거투쟁 10대요구>를 대중투쟁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3-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다. <10대 요구>를 충기치로 총선투쟁을 조직한다.

2. 이러한 기초 하에 노동자참가단을 통해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선거전술을 통해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한다.

2012년 노동자계급 총선거투쟁 10대 요구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야간노동 철폐!
-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구체적으로 노동자참가단을 중심으로 '가칭' 자본가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을 구성한다. '가칭'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에서 후보전술 결정 시 후보는 <2012년 노동자계급 총선거투쟁 10대 요구>에 준하는 현 시기 행동강령을 공약으로 내거는 노동자혁명 후보로 그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 후보는 '3

월투쟁' (쌍치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출마한다.

그리하여 '3월투쟁'이 민주대연합/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3월투쟁' 한 가운데서 이 독자 정치흐름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낸다. 이것을 총선 이후 대중투쟁 대오 내 유의미한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 한편 이러한 선거전술이 노동자참가단에서 통과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있을 시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한다.

2012년 총선방침 해설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도 더욱더 커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기초 아래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

화하고 있다.

한편 투쟁사업장 주체들 사이에서도 총선 국면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활용하지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 안는다는 이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쌍치를 비롯한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거점을 옮겨 집중투쟁 한다는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집중투쟁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투쟁 판을 만드는 것은 진작부터 절실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이 집중투쟁을 총선 국면에서 반MB 선거심판의 들러리로, 야권연대의 지지 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집중투쟁에 이른바 '노동자 후보들'을 앞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집중투쟁을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총선을 활용하여 자기 투쟁을 알려내고 요구들을 쟁점화시킨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영락없이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2월부터 4. 11 총선 시점까지 모든 투쟁들은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의 정치흐름으로 휩

슬러 들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3월부터 직접적인 총선 국면에서 설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개점휴업’하지 않고 서울집중투쟁 같은 기획을 통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강화시켜 주는 투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투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쌍차 희망텐트조차도 그 자체로는 선거에 대당하는 흐름이 될 수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어떤 대대적인 집중투쟁이라 하더라도 3월 국면에서 다른 정치 대안이 실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쟁 자체만으로 결코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대세몰이)에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해낼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쌍차를 비롯하여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자기 문제 해결보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라는 정치투쟁 과제를 더 앞세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대안 있나?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 또는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아무 투쟁도 하지 말고 정치논쟁만 하라는 거냐?’라는 반문만 듣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대안 정치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 반대’는 투쟁이 아니라 주의주장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야권연대와 정치권에 의탁해서는 당신들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실물적 대안 흐름이 없다면 투쟁 주체들 중 유의미한 소수파조차 야권연대 반대쪽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쳐 버리게 되는 구체적 맥락이다.

그렇다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3월 서울집중투쟁 대신 투쟁판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것은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순회투쟁을 3월 국면에서 또 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 없는 자족적인 투쟁 이상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서울집중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투쟁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노동자참가단 3차 집담회에서 다수가 제기했던 정치총파업 ‘카드’는 2012년 투쟁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안이겠으나 그것이 3월투쟁 계획일 수는 없다. 하반기 정치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투쟁 계획으로 같음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

에 아무 실질적 투쟁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 설사 대기주의가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을 결성하여 3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면 정세 대응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움직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월투쟁 계획의 핵심은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서울집중투쟁에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 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극적 선거 전술 없이는 실물적인 정치 흐름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선거전술이 펼쳐질 때에만 대중투쟁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과 결합하여 선거 국면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운동의 수혜가 자신들에게로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파는 이번 선거에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 선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연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독

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야권연대 반대”를 선거방침으로까지 구체화시킨다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범좌파 블록으로 중앙파에 견인되고 있는 노동전선 역시 “야권연대 반대”를 적극적인 선거방침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노위는 스스로 내걸었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좌파 블록을 통한 노동계급당 건설로 ‘우회로’를 찾으려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와 야권연대를(나아가 진보신당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말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실물적으로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노위 역시 회피하고 있다. 중앙파와의 범좌파 블록 및 진보신당과의 진보좌파연석회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사노위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세력은 말로는 야권연대를 비판하되 실물적인 대당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다.

따라서 반MB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

당하는 실물적 정치 흐름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은 현재로선 노동자참가단 말고는 없다. 노동자참가단은 <희망발걸음>과 함께 이번 3차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서 금속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이 <희망발걸음>처럼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정치적 가치를 선명하게 지켜주고 대안적인 정치 흐름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희망발걸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가치를 지켜줄 수 없는 조건과 견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희망발걸음>이 대중투쟁 판을 기획하고 일정을 잡는 데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스스로가 야권연대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같은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참가단이 예를 들어 ‘총파업 실천단’ 같은 경제적 위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여 대중적 동력 확보를 놓고 <희망발걸음>과 경쟁하는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정세적으로 의미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먼저 ‘작은 투쟁’을 통해 대중적 저변

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큰 투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론적 관점 하에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의제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투쟁들 자체도 올바른 정세적 맥락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정치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릴 것이다. 노동자참가단은 <10대 요구>와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투쟁 의제를 확대하여 2012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참가단이 자기 본연의 위상과 임무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여 ‘3월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운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 하반기 정치총파업,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정세 반전,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자혁명당 건설의 전망을 열어젖힐 정치부대 형성을 3월투쟁에서부터 착수해 들어가자.

역명

2012년 2월 19일

쌍용차지부 생활안정기금
CMS모금운동

동지의 월 2,000원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단
(blog.jinbo.net/occupy77)

선거 전술 - 기본 원칙

선거 전술의 기본 원칙에 대해 상술하기 전에 먼저 의회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최초의 자본주의 강국들에서 계급투쟁이 무르익어 가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20세기에 이들 나라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거듭 발전함에 따라 식민지 세계로부터 초과이윤을 착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국주의 부르주아 계급은 자국 노동자계급을 달래는 개량책으로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개량과 양보조차도 노동자계급의 투쟁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그 투쟁이 의회 선거와 결합하는 과정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제2 인터내셔널 정당들(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의 개량주의적 타락과 함께, 양

보와 개량을 따내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이들 ‘노동자’ 정당의 정치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본의 양보 여지가 커지고 이들 노동자 정당의 의회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자계급 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의회와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 혁명가들은 이 환상을 걷어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대중이 그들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무가치함과 그 아바위성을 볼 수 있게 해 줄 전술을 제출, 운용함으로써다. 혁명가들의 의회 및 선거 전술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 초기 코민테른(스탈린주의가 지배하기 전인 1919-22년 시기의 코민테른)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기본 원칙 가운데 여기서는 선거 전술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1. 대선이나 총선 등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혁명가들의 전술은 선거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의식을 발전, 강화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자본가계급에 기반을 둔, 또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라고 호소, 선동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 아래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గా 아닐 수 없다. 자본가계급과는 전혀 무관한 세력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정치집단(예컨대 박원순 후보진영이나 녹색당 같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실제로 똑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임에도 단지 은폐되어 있을 뿐으로, 이들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 사회주의자들은 선거가 제공하는 연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후보의 공약은 사회주의 강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회주의 강령을 구체적 정세에 맞춰 적용한 바로서의 <행동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행동강령이 없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이란 기만이며, 따라서 행동강령의 정립은 사회주의

후보 전술의 전제이다.

3.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지자들(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쪽으로 획득하고 그들을 조직화하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당선은 언제나 이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

선거 캠페인 자체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들을(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적 요구들이라 하더라도) 쟁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한편 집권해서 또는 의회 진출을 통해 무언가 변혁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의회 같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활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초 위에서의 당선만이 승리일 수 있으며, 정부나 의회 무대 내에서의 사회주의 전술 운용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까봐 우려하거나 그러한 악선동에 영향 받아 후보 내는 것을 꺼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개량주의자들이 당선되어 기만적인 국가기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새롭게 충원되고 조직화되는 것이 계급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특히 총선의 경우 개량주의자들이 우세한 노동자계급 밀집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자제되어선 안 된다.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이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4. 조직 규모나 주체 역량의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후보를 낼 수는 없지만, 다른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 후보가 있을 때 비판적 선거 지지의 형태로 노동자 공동전선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결정 기준은 이 개량주의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아니라 그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개량주의자들이 친노동계급적 공약(예를 들어 정리해고제 폐지)을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겠지만, 자본가 체제 안에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설사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게 이 점을 환기시키고 경계시켜야 하며,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개량주의자들과 그들의 노동계급 기반 사이에 생겨나는 모순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개량주의 정당을 상대로 한 공동전선의 운용이 가능해 진다.

이 전술은 그러한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이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출마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 선거 지지란 후보의 강령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그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노동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사회주의 강령은, 후보에게 제기하는 요구안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사회주의 선전의 토대가 된다. 이 강령이 개량주의자들의 강령보다 우월함을 설명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이 과거에 했던 제한적인 약속들마저도 이행하지 못해온 이력을 알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비판으로 노동자 대중들이 쉽게 이 개량주의 당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당이 자신의 최근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노동자계급의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개량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내건다. 그리하여 개량주의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조금도 자제하지 않는다.

5. 사회주의자들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제도권 개량주의 정당 후보에 대해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할 경우 그러한 비판적 선거 지지가 상당 기간에 걸쳐 되풀이하여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이 결코 개량주의 후보에 대한 항상적이고 자동적인 승인 같은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용하면 전술이 전략으로 탈바꿈해 버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전술은 또한 개량주의 정당의 집권을 노동자계급이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만이 개량주의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일단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토록 하는 데에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전략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전술 운용은 언제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부들 간의 ‘정권교체’(‘진보적 정권교체’까지 포함하여)가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이 그 자신의 지배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 특정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정권 타도’나 ‘정권 퇴진’ 같은 공허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개량주의 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켜주거나 확대해 줄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유포하는 것이 된다.

또한 개량주의 정당에게 집권하여 사회주의 강령을 받아 안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코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량주의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

당보다는 ‘차악’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계급에게 개량주의 정당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러한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격 또는 방어의 한 형태가 되어줄 것이라는 위험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개량주의 후보가 당선되어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가 들어서면 애초 계획된 자본의 공격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자들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6. 자본가계급이 계급투쟁의 분출을 꺼뜨리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이 더 우월하고 중요함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 보이콧이 필요하다. 혹은 제도권 정당들에 맞서 전투적 투쟁 대표자들(파업위원회, 공장평의회 등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전술로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이콧 전술을 실행하는 상황은, 선거 참여가 노동자계급을 현재 전면화되고 있는 투쟁(예를 들어 부르주아 질서를 넘어설 기세를 띤 혁명적 봉기)으로부터 명백히 분리시키는 상황이거나, 또는 대중들이 선거의 반혁명적 의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상황(1905년의 러시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전혀 없는 경

우에는 반드시 선거 기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 후보가 없을 때(개량주의 정당 후보조차)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 동조적인 후보라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의 공식적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이유로 부르주아 정당 후보(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야권단일화 후보나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 같은)에게 투표하라고 노동자계급에게 권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 기권이 불가피할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손상시키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거 기권에 따르는 수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조직의 행동강령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7. 사회주의자들이 비혁명적 정당들한테 비판적 지지를 보낼 경우 이는 그 당이 노동자계급과 맺는 관계를 근거로 해서 보내는 것이다. 후보 개인의 견해나 대중들 사이의 덕망이 비판적 지지의 근거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노동운동 내 이른바 '우파' 후보에 대당하는 '좌파' 후보라는 것이 지지를 차별화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8. 중도주의 후보의 공약이 여타 후보의 공약보다 좀더 낫다는 것을 근거로 중도주의 후보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도 사회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중도주의자라 함은 혁명적 입장과 개량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단을 말한다. 중도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노동자계급의 지도부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러한 동요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중도주의 조직(주로 연합조직)이 결성되곤 하는 사회적 위기의 조건 때 특히 그러하다.

보통 중도주의 조직의 공약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으로부터 취사선택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개량주의 공약보다 질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인데 왜냐하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의 우월성은 그 요구들 각각이 그 자체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요구들이 하나의 통으로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혁명 전략의 단지 한 부분만을 포함한, 그리고 이것을 개량 전략의 일부분 -- 즉 자본가계급과의 협조 전략 -- 과 뒤섞은 그러한 선거 공약을 내거는 당은 노동자계급을 재앙으로 이끌 당, 투쟁의 결정적 계기에서 분열로 이끌 당이다.

유의미한 노동계급 세력들이 개량주의와 진정으로 단절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쪽으로 이탈해 나올 때 중도주의 후보가 이러한 단절을 대표하는 경우, 그러한 '투쟁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 선거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것은 그러한 후보가 개량주의 정당 내 공공

연하게 반동적인 상대 진영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와, 개량주의 정당의 ‘공식’ 후보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중도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내 중요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경우(설사 그들이 선거에서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또는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9. 계급투쟁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 ‘계급 프라이머리’(노동자 예비선거)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 조직들의 전원회의(토론회, 집담회 등) 개최를 제기할 수 있다. 어느 노동자 정당 후보가 이번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지, 어떤 요구들을 내걸어야 할지를 토론했다 결정하는, 그러한 ‘노동자 프라이머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전술을 위한 선전·선동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환상이 가장 강한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전원회의 또는 ‘노동자 예비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제기하고, 가능한 경우 독자 후보를 내놓는다.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고

민주적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채널을 통해 사회주의 후보를 출마시킬 때보다 사회주의 선전 선동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갖는다는 조건 하에서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부르주아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철수시킬 수 있고, 결정된 ‘노동자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낼 수 있다.

10. 오직 일관된 사회주의 정치만이 철저히 노동자계급 독자적인 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 비혁명적인 일체의 정치 흐름들(현재 통진당에 대항하는 ‘진보좌파정당’ 흐름, ‘노동자계급정당’ 흐름, 범죄파블록 등등의 중도주의적 흐름까지 포함하여)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계급협조(예를 들어 민주대연합/ 야권연대)로 흐름 속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이 그 같은 정치 흐름들을 향해 제기할 기본 요구는 ‘자본가계급과 단절하라!’이다. 이 요구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인민선 정치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혁명

[자료] 선거방침 총회 소수안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안)¹⁾

1.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총선방침(안)으로 선거 보이콧을 당면 선거전술 투쟁 방침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선 투표거부와 반의회 계급투쟁 흐름을 조직한다.

2012년 총선 방침(안) 해설:

1.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대중적인 저항과 파업, 쟁거 투쟁이, 몇 년간 혁명적 투쟁으로 치솟은 바 있으며, 1930년대 이래 전 세계적인 혁명 투쟁의 객관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혁명운동 세력의 일부이며, 일국 사회주의 시야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적인

관점에서, '혁명은 지속된다.'는 국제적 계급 투쟁의 흐름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한 투쟁을 제기해야 한다.

2. 2012년 한국 자본주의 정세는 이명박 정권 레임덕 현상으로 나타난 부정부패, 유럽 국가 재정위기 파급, 미국- 이란 전쟁 분위기 고조로 인한 (석유) 물가 폭등,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정리 해고, 한국 경제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 등 잠재된 한국 자본주의 위기가 폭발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 정세 속에서 우리의 총선 활동 정치 방침 안은 1) 정치적 명확성과 실천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2) 무엇을 핵심기조로 잡고 선전, 선동하면서,

1) 2월 19일 노혁주 임시총회에 제출된 총선방침(안)으로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소수안입니다. - 편집자

계급대중투쟁을 제기하고, 조직할 것인가? 3) 우리는 개량(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다른 무엇을 실천하면서 혁명당 건설 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할 것인가?로 집약할 수 있다.

3. 자본주의 쇠퇴시기에, 계급대중투쟁을 제기하고 혁명당을 건설하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칙적인 부르주아 의회와 선거 전술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선거 전술 원칙은 당면 시기 부르주아 의회 선거거부, 투표거부 입장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쇠퇴시기에
부르주아 의회와 선거 전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

3-1. 자본주의 쇠퇴시기에 혁명세력들의 부르주아 의회와 선거전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상승하는 시기는, 의회주의 제도에 노동자계급의 참여를 통해 생활개선과 개혁들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의회가 이용될 수 있었다. 19세기 보통 선거권을 향한 투쟁은 당시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를 조직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들 중의 하나였다. 선거 시기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강령과 정책 선전 및 선동 가능성이 활용될 수 있

었다. 부르주아적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한 연단을 의회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쇠퇴기인 현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자체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비판과 혁명 정치를 직접적으로 내걸고, 계급투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시기에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은 현 자본주의 위기가 의회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계급 대중투쟁의 직접적인 행동과 대립되는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의 참가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특히 대중 미디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르주아 의회 선거는 계급 대중에게 정치시장의 세련된 정치상품, 이미지로 투영된다. 노동자 계급은 정치 소비자,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부르주아 선거판에서 투표를 하는 행위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주장이나 목소리 없이 정해진 부르주아 선거 규칙과 투표용지 안에서 활동으로 축소시킨다. 개별 투표함과 투표소 안에서 노동자계급은 작업장의 동료들과 투쟁현장의 동지들과도 차단된 채, 부르주아지와 얼굴도 모르는 지역주민들과 섞여 분간하기도 힘든 정당이나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표로 뽑아주어야 한다. 즉,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판의 투표 속에서는 그 어떠한 계급연대와 계급의식도 찾을 수 없다.

3-2. 노동자계급투쟁과 그 안에서 혁명은 동세력의 개입이,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조직된 통일전선(공동전선) 선거 전술은 혁명운동의 지향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급격하게 계급대중의 전투를 ‘부르주아 의회 선거 틀’로 종속시켜버린다. 즉, 노동자 계급 투쟁의 목표와 혁명적 능력을 선거정치로 유도한다. 다른 한편 선거 결과가 국민의 뜻이자 결과로 반영되면서, 부르주아 지배 계급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선거정치는 항상 노동자 계급을 ‘쪽수’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의 핵심적인 지배양식이며, 노동자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

사회민주주의- 개량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3-3. 선거 시기, 계급대중투쟁을 제기하는 혁명가들의 개입원칙은 공동투쟁을 통해 계급투쟁의 확산, 계급의식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들의 정파 조건을 고려한 통일전선(공동전선) 선거전술 방법론은 우리의 원칙이 될 수 없다. 의회, 선거전술 투쟁 문제는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이 공동으로 토론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

선거 시기 대중투쟁, 보이콧 전술을 통한 반

의회적 대중투쟁 확산이라는 공동투쟁은 혁명운동의 기본원칙이다. 다양한 정치세력과 후보전술을 통한 정치적 공동전선은 혁명세력의 고유한 정치와 강령적 실천을 현실에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의회적 대중투쟁 확산을 통해, 우리의 정치 강령과 노동자 투사를 혁명당 조직화의 주체로 조직화해야 한다. 계급이 역사적으로 맡게 될 혁명적 지향의 의식하도록 분명하게 선전 활동해야 한다.

3-4. 의회와 선거참여 전술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들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수동성을 조장한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참여, 그것과 관련된 각종의 선거 연합들은 그들이 내거는 급진적 정강들, 연합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의 투쟁, 자기결정과 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개입전술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목표와 자립성에 부응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계급투표란 부르주아 선거관에서 노동자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여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모든 현장과 투쟁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정치의식의 표현과 저항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주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계급투표란 부르주아 선거관과 투표함에 동

원되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의 계급투표란 부르주아 투표함을 거부하고, 투쟁현장과 계급연대의 공간에 정치발언대를 만들어 투쟁을 결의하고, 광장을 점거하고 노동자 총회를 열어 계급적 연대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계급투표란 노동계급을 대리하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언제나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그 책임을 유지할 계급의 투사를 뽑고,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투표함에 갇힌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쟁의지를 제한 없이 표출하는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 공간에서 항상 분리되고 분열되었던 노동자계급이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장이어야 하고, 그 공간은 부르주아지의 투표소가 아니라, 집합적이고 공개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이 압도적으로 표출되는 곳이어야 한다.

투표소가 아닌 지역의 투쟁사업장과 투쟁의 현장에 가서 투쟁의 쟁점을 걸고 파업을 위한, 연대를 위한, 저항을 준비하는 계급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고립되거나 앞선 투쟁, 장기간 투쟁으로 지쳐있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노동자 투쟁에 형식적 연대가 아닌 자기 자신의 투쟁으로 계급적으로 연대하자.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계급적 연대의 표시로 투쟁

에 함께하고 거리를 광장을 점거하고 노동자계급 자신들의 총회를 열어 자본과 권력을 규탄하고 항거하는 직접정치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당면 핵심 실천 방향에 대해

- 이른바 MB심판론/야권연대로 표현되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부르주아 정치 세력, 원내 교섭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의회 좌파정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진보신당(사회당)등의 선거 정치(정책)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첫째, 반의회 대중투쟁을 핵심적으로 선전, 선동한다.

“1%를 위한 선거를 거부하고, 99%를 위한 대중행동투쟁으로 나아가자” 기치 아래 총선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한다.

- 독자적인 토론회 개최, 정치 팸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이를 위해 노동자 참가단에 제안한다. 총선투표 거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집중한다.

둘째, 노동자 대중투쟁과 계급적 조직화

- 민주노총 대대에서 결정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모임 · 전국 투쟁사업장 총회를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예상되는 3월에 학생 등록금 투쟁(대학을 점거하라) 연계 투쟁. (노동자-학생 연대 투쟁 부활).

셋째,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노동자투사를 혁명당 조직화의 주체로

- 이른바 예상되는 진보/좌파의 계급정당 형성 (진보신당/ 사회당, 새노추 등) 사노위 비판적 정립을 통한 분리 구축.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아가자!

- 통진당 반대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 -

고민택

한국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과 역사는 2011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이하 대대)에서 최종적 파산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날 대대에서 2012년 선거방침과 함께 정치방침을 정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지만 회의 도중에 참으로 어이없게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가 일어나 토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만 것이다. 물론 정족수 미달 자체는 파산의 원인이 아니라 최종 결과일 뿐이다. 아무리 늦춰 잡아도 민주노총을 통한 정치세력화, 그의 짝 이름이었던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지난 2007년 대선을 경유하면서, 나아가 2008

년 분당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때 이미 실패로 끝났다.

그로부터 통진당이 등장하기까지 민주노총이 앞장서 추진한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시도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연속적 과정에 불과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라는 말처럼이나 마 ‘진보대통합’을 시도하려다 ‘민주대연합’만 키웠는가 하면 끝내는 자본가정당과의 통합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날 대대의 모습은 민주노총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

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

안건 심의가 무산되고 난 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선거방침은 중집에서 결정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다는 것과 나아가 “정치방침은 조합원 총투표를 묻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훈

위원장은 2월 5일 통진당 “2012 총선승리 전진대회”에 참여하여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 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대대’에서 무산된 안건을, 중집위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켰다. ‘대대’에 상정된 안건이 무산되었다면 다시 ‘대대’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찬반을 묻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대대 안건’을 ‘중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지은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

총 ‘상집’에서는 위원장이 ‘대대’에서 언급한 ‘조합원 총투표’도 아닌 ARS 전화를 통해 정치방침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겠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선거방침’은 물론 ‘정치방침’까지도 사실상의 ‘통진당 배타적지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의가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되자, 민주노총 중집에서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 사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통진당이 성립되기 이전,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논의가 무성할 때, 즉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진보대통합(당)’이 성사된다고 해도 그 ‘진보대통합(당)’이 당시 민주당(현재 민주통합당)과 민주대연합(야권연대/반MB선거연합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한 요구였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대연

합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으며, 마침내 통진당이 등장하는 사태로까지 진행되었고, 끝내는 그 통진당을 민주노총이 또 다시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버리고 만 것이다.

통진당 등장 이후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민주노총을 향한 요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통진당 자체가 이미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통합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통진당에 대한 조직적 입장과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즉 민주노총의 선거/정치방침을 정하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게 된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을 막기 위한 ‘선언운동본부’의 활동과 ‘10만조합원 서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 바로 이런 정황 때문에 민주노총 중심은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모두 ‘진보정당’이라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진당만 진보정당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반발이 훨씬 강해질 것은 물론 잘못되면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끼워 넣은 것이다. 즉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던 것이다.

통진당/배타적지지 반대운동의 한계

이제 현실은, 민주노총은 4. 11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결정한 상태다. 사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통진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동안 진행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전면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존재하거나, 그게 아니면 통진당 자체를 자본가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통진당이 압도적으로 자본가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둘 모두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무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현실은 통진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대안이 곧 진보신당과 사회당(또는 이들의 통합당)에 대한 지지, 지원을 결정하는 것 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에는 주객관적으로 어떤 설득력도 명분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선언운동본부’도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즉각적 대안을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평가’를 다시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데 그



민주노총 중집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맞서 통진당 배타적지지 반대 선언운동본부측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상황이 현재와 같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와 잘못된 정치세력화 방향을 그대로 가게 놔둬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나, 아니냐’라거나 또는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따지는 수준의 논쟁 구도 자체를 먼저 전복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 ‘선언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대 소집’ 요구도 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태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낼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설령 ‘대대’가 다시 열린다 해도 기존 프레임(틀)과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는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선언운동본부’ 토론에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정당’, ‘혁명정당’을 별

다른 매개 없이 곧 바로 대입시키거나 잘못된 매개를 통해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매개를 거쳐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원칙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의 정치조직, 또는 노동자계

급 속에서 먼저 동의한 일부와 노동조합 바깥의 정치세력이 결합한 형태로서의 정치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10여년의 과정을 거쳐 이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현실과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논쟁 중인 쟁점이며 무엇이 정답인가를 여전히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만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이 논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이 묻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역사와 논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그동안 민주노총이 구 민주노동당과 일대일 대응,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구체적 역사적 현실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알다시피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특정 정파의 노선이나 목표이기 전에 대중 자신의 요구이자 바람이었다. 또한 그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는 기존 부르주아 정당이 아닌 노동자가 다수로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권)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그 별도의 정당이 어떤 (성격의)정당이냐의 문제는 거의 중요치 않게 다루졌다는 데 있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도 출범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87년 이후 성장한 대중적 노동운동의 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하게 다가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었다. 혁명 세력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혁명 세력이 처음부터 타의나 강제에 의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배제당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이 정식 출범하기 전인 1999년 8월 23일 열린 제15차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민주노총의 방침’ 중 “1. 일반원칙 1)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대중조직으로서의 자체 정치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민주노총은 기존 부르주아와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조합원 및 각급 상급단체 임명직 간부)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를 채택함으로써 위의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정치조직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바로 위 일반원칙을 되살리는 수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위 일반원칙은 그 뒤 비록 사문화되었지만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대의원)에게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중심으로 한 운동은 한계가 뚜렷하다. ‘선언운동본부’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미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지 현실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운동이 갖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즉 그 운동을 중심에 놓을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또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과 실천이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결

과를 낳을 뿐이다. 다시 말해 프레임과 패러다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갇히는 효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민주노총 대대는 제 정파 사이의, 더 정확하게는 이미 충분히 관료화된 상층 간부 사이의 의미 없는 정쟁터가 된 지 오래다. 어떤 면에서 민주노총 대대는 부르주아 의회 이상으로 대중과 괴리되어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자립해 있다. 그 정도가 심해 대대를 겨냥하여 아래로부터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아니 그럴수록 대중에 대한 직접 정치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이는 단지 특정 정파의 패권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특정 정파를 떠나 모든 정파에게 일반화 되어 있다. 이른바 3분립(국민파, 중앙파, 현장파)구도나 좌/우 구도조차도 벌써 무너진 상태다. 오직 조합주의, 개량주의 정치를 둘러싼 현실적 이해관계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대중들에게 운동으로서, 요구와 주장으로서 그래도 객관적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일반원칙을 최대한 되살리자고 말하는 것 정도이다. 그 이상의 운동과 주장은 각자 알아서 펼쳐 나가야 한다.

배타적지지 자체를 유지하면서 배

타적지지의 대상을 누구로 또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배타적지지는 과거에도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진보정당'이 그나마 현재와 같은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배타적지지 방침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부르주아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수동화시키는 부작용이 더욱 컸을 뿐이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을 수단으로 대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 혁명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파를 떠나 활동가 대부분을 '진보정당'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보정당'의 성장조차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배타적지지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거나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파와 새누리당 지지파의 갈등으로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66년만에 무산되었다. 노동자 조직이 출세주의자들의 본거지가 되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

사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나 통진당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거나, 결성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너무도 당연하다. 통진당이 성립되기 이전에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어났던 것도 그 때문이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곧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훨씬 더 부족하며 따라서 아직은 진보정당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진보정당이나, 아니냐 이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통진당이 자본가 정당의 한 분파와 통합한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통진당이 가장 앞장서서 민주통합당과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후보단일화/반MB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해 현재의 통진당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통진당 반대는 곧 민주대연합을 반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 진짜 문제는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나, 아니냐에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이 규정한 대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모두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모두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3 진보정당' 모두를 한꺼번에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 동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 '진보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과 세력이 아직 대중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박원순, 안철수, 나꼼수 현상이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며, 더 대중들 가까이 있다는 데 있다. 즉 '아니지만, 그 무언은 아직 없는' 상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라도 '없는 현실을 있는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의 요체가 여기에 있으며, 그 성패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

먼저 평조합원의 직접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운동은 과거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운동과는 질을 달리한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민주대연합을 하더라도 한국노총과 같은 어용노조로 규정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근본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다. 현 정세가, 지금의 계급관계가 87년 이전의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 아래에서의 정세가 아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험 없는 (초보)노동자들이 아니다. 술한 투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진보정당' 1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했다. 평조합원운동은 바로 거기에 기초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분화하여 정파 노조로 재편하려 하거나 민주노총 자체를 이른바 적색노조로 만들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조합원운동을 크게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하는 속에서 진행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노동자 평의회 건설에 있어서 혁명정당의 역할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부르주아 체제 안에 머물렀지만, 새로운 노동자 투쟁은 혁명정당과 함께 부르주아 체제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 정도는 정세와 역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일반적, 일상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 원칙적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드러난 역사이다.

첫 번째 전망은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시키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노조관료 지도부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다수 노동자(조합원)를 노조관료 지도부에게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자연히 평조합원운동을 일으킬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양되어야 할 대상이다. 노동조합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동조합이 갖는 이중적 성격은 노동자가 갖는 이중적 성격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지배체제의 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체제가 노동자에게 가하는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두 번째 전망은, 평조합원운동은 평의회 건설운동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혁명 세력이 주장했던 의회주의, 사민주의, 대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즉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시키는 양날개 전략은 파탄 났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아직 한국의 현실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를 통한 수권(집권)전략은 이미 서구에서 실패로 끝났으며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즉 평조합원운동은 방금 말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에 그치지 않고 평의회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절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

것은 곧 평조합원운동이 방어에서 공세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기본적, 원칙적으로 예비/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담지체로서의 평의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과제 또한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물론 평조합원운동과 평의회 건설 운동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평의회는 노동조합만을, 즉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계급, 즉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를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노동자, 즉 그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는 평의회 건설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평의회 건설은 혁명적 시기, 혁명적 정세에나 가능하다는 주장도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평의회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정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상적 시기에는 평의회 건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평조합원운동과 평의회 건설 운동 사이에 만리장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에 대한 거부와 그 대안은 혁명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건설도 함께 있다. 노동조합도 그렇지만 평의회 역시 그 못지않게 계급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정당 건설 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평조합원운동 그 자체를 일으키는 것과, 평조합원 운동이 지향해 나가야 할 전망, 즉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평의회 건설 운동을 앞장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명정당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정당’,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결집체’ 등으로는 현 정세를 돌파할 수도, 통진당 반대 투쟁을 힘 있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펼칠 수도 없다. 기껏해야 통진당보다 무엇 하나 나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왜소함만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역사와 계급에게 필요하고 필요할 때 그에 맞는 운동과 투쟁을 펼치지 않고, 자기 조직이 처해 있는 조건에 맞춰 역사와 계급을 끌어다 맞추려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니 현재의 조건에서는 오히려 통진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통진당 반대투쟁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을 저지하고, 나아가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되는 것을 또한 저지해야 하는 것이 현 정세의 핵심이다. **혁명**

한국판 점령운동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부터!

임천용

2008년 이래로 세계 자본주의는 더욱 격화되는 공황속에서 각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자본의 위기전가 공세를 통해서만이 그 숨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긴축과 구조조정”이라는 형식으로 대변되는 대중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인 고통전가는 노동자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며 한편으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누적시켜왔다. 이러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는 대중투쟁을 촉발시키며 아랍의 혁명적 대중반란과 남유럽의 대규모 대중시위와 노동자 총파업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선 대중시위와 광장점거가 결합된 점령하라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에 맞선 99%의 대안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점령하라 운동은 탐욕스런 월가의 금융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을 넘어 체제에 도전하

는 반자본주의운동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마야흐로 현 세계정세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자본의 지배에 대항해 분노한 계급대중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형국이다. 세계자본주의에 긴밀히 연동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명박정권은 부자감세, 고환율 유지 등 친기업정책과 노동관계법 개악, 일상화된 구조조정 등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대중들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렸다. 1% 자본가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놓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내몰렸다. 물가와 전세 값, 대학등록금은 가파르게 올랐고 청년실업자들은 거리를 배회했다.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는



한진중공업 정거에서 쌍용차를 점거하러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높아져갔고 급기야 희망버스운동과 같은 대중투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작년 한해를 투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운동은 사기저하로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계급대중들에게 자신감과 투쟁의지를 불러 일으켰다. 단사에 갇혀있던 정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장의 담을 넘어 전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가 밑바탕이 됐다. 야권연대 세력들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은 정치적 떡고물을 얻고자 달려들었고 이들이 주도한 국회권고안을 통해 한진중공업 문제는 일단락 났지만 이 운동은 이후 정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쌍차 희망텐트촌의 두 가지 흐름

12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앞에 희망텐트를 치고 투쟁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한국판 점령운동인 쌍용차 희망텐트투쟁은 세계적인 '점령하라' 운동의 영감과 직접적으로는 희망버스운동의 비판적 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희망버스운동이 사회적 이슈화한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문제를 계급대중들의 총단결 투쟁 전선으로 더욱 확장 발전시켜야 된다.

쌍용차 희망텐트촌 운동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서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 쌍차 노동자들의 자살이 파악된 것만도 20명 께를 넘겨버린 상황에서 쌍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척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정리해고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금속노조처럼 정치권에 기대어서 해결하려는 경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금속노조로 대표되는 공식 노동조합 질서에 희망텐트촌 운동을 종속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당 등의 야권연대에 기대려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에서 금속노조가 소속 사업장인 한진중공업 투쟁에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쌍차투쟁만큼은 금속노조가 주축이 되어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면피를 위한 수준의 투쟁에 한정하면서 쌍차투쟁을 총선 이후 국회로 가져가서 야권연대에 힘입어 8.6합의 수준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쌍차지부는 이미 2009년의 8.6합의는 무산되었다고 선언하고 정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경우 쌍용차 사측이 “2010년 9월부터 무급휴직자 복귀와 공장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해고자를 우선 복귀 시키겠다”는 합의를 1년 넘게 마힌드라 자본이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8.6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가 쌍차문제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바 있다. 금속노조가 여전히 8.6합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6월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에서 8.6합의 수준에서 일정한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희망버스 운동이 내걸었던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이에 근거한 한진 정리하고 철회 요구조차도 자본주의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요구로 주장했던 일단의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있었다. 이들과처럼 노동자계

급의 요구를 민주당 등 자본가 야당에게 기대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할 생각이 없다면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쌍차 희망텐트촌 투쟁은 무엇이란 말인가?

쌍차 동지들은 8.6합의를 체결하는 동시에 2009년 공장점거를 풀었지만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에 쌍차 동지들에 대한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쌍차 77일 점거파업이 쌍차자본에 의한 치밀한 회계조작에 의한 법정관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회계조작으로 시작된 정리해고와 공장 점거파업, 그리고 공장점거를 풀면서 만들어진 8.6합의는 이미 무산된 것이고 쌍차노동자들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두말할 나위가 없다. 쌍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자본에 의해서 8.6합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쌍차투쟁의 관건은 금속노조가 이미 무산된 8.6합의를 쓰레기통에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쌍차 정리하고 철회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노동계급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다.

후자의 흐름은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다. 쌍차 희망텐트촌 운동에서 이 흐름은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발걸음”과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



서울 재능에서 평택 쌍용차까지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단” 두 가지로 나타났다.

희망발걸음의 경우, 재능지부 1500일 투쟁을 진행하고 1월 30일부터 서울 혜화동 재능학습지 본사에서부터 평택까지 11일 동안 쌍차 1000일 3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300km를 행진했다. 희망발걸음은 30여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매일 10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희망발걸음은 투쟁을 시작하지 7년이 넘은 코오롱 정투위 동지들부터 새해 벽두부터 파업투쟁을 시작한 세종호텔 동지들까지 함께 했다. 이러한 연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사업장은 다르지만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동질감을 형성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희망발걸음 도중에 세종호텔 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심간부 징계수용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세종호텔 노조 지지 시위를 가기 몇 시

간 전에 타결된 것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 폐투쟁위원회 동지들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전국의 사업장을 돌면서 투쟁에 연대하고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을 선전해 나갔다. 지난 해 희망의 버스를 진행할 때 쌍용차 동지들이 먼 길을 걸어서 한진중공업 투쟁에 함께 했던 것처럼 노동자적 방식으로 연대한

것이다.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의 경우, 쌍용차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전국 순회를 진행했다. 1차 순회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순회 때에도 쌍차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1%에 맞선 99%의 투쟁이라는 것,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원복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의 노동자들을 만나 나갔다. 특히 2차 순회 때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부의 타블로이판 선전물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CMS 모금운동을 진행했다.

조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로 공식 노동조합 운동의 압력을 넘어서자

이러한 흐름들에 의해서 2월 11-12일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이 진행되었다. 전차 포위의 날처럼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무대에 서는 것이 금속노조 등의 관료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쌍용차 문제는 결국 국회가 바뀌고 나서야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희망텐트촌과 같은 투쟁들은 야권연대를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내내 노동자 계급 스스로 독자적인 요구를 내걸고 자본가 정권에 맞서 투쟁할 의지도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조금 더 온화한 자본가야당이 노동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을 위한 표찍는 기계로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2-13일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활적인 투쟁과 요구를 단지 야권연대를 위한 들러리로 앞세우고 국회와 정권이 바뀌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한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고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사탕발림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과거에 그러한 정부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조합들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정권들의 후신들과 반이명박 전선이라는 명분으로 함께하는 것은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다르게 희망발걸음은 희망버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여러 경향의 단체와 개인, 그리고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 폭넓은 참여라는 측면에서 장점이다. 노동조합 밖에서 노동자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외부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목표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필요가 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는 희망버스 운동 때 그랬던 것처럼 공식 노동조합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조직이 관

료화 되어버리고, 노동자 투쟁을 노동자계급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에만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뒤늦은 아쉬움이긴 하지만 지난해 희망버스 투쟁 때, 한진 문제 국회권고안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금속노조의 합의에 맞서 한진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야 했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정투위 출신 지회장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투위 동지들의 복직 유예기간에 현장은 사측으로 넘어가 버리고 지난해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여전히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버스 운동의 성과가 정치인들에 의해 국회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버림으로써, 한진 정투위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면서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경험에서 보듯이 희망발걸음은 공식 노동조합과의 불가피한 긴장관계를 애써 외면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총 등 공식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파업과 같은 노동자적 방식으로 함께하고 투쟁했다면 희망버스나 희망발걸음은 부차적 위치에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3차 포위의 날까지 보여주었던 희망발걸음, 그리고 노동자참가단 활동의 실천적 의의는 공식 노동조합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조합원들의 관성을 깨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

한국판 점령운동으로 나아가자

국제적인 점령운동의 한국판이 형성되어질지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다. 희망발걸음은 희망버스 운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동자 참가단도 새로운 시도다. 특히 희망발걸음은 “비정규직 정리하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을 제안하고 있다. 1000일을 넘은 쌍차투쟁의 희망텐트촌이 점령운동의 시작일 수 있고, 어쩌면 거리농성투쟁 1500일이 넘은 재능지부 동지들의 천막농성장이 점령운동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정리하고와 비정규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이 한국판 점령운동의 시초일 수 있다. 힘들지만 끈질기게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온 노동자들이야말로 한국판 점령운동의 선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정리하고, 비정규직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은 지루한 투쟁이 수년씩 전개되면서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다. 이러한 투쟁들은 상급 노동조합에서도 손 놓아 버리고 정치권에서도 도저히 남는 장사가 아니었

다. 그런데 자본의 경제위기 속에서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 심화는 자본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친서민적 이미지 제고의 주요한 수단으로 노동문제를 다루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개점휴업 상태로 있던 민주노총 등의 노동조합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변화의 흐름이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파업 선언이 정치권의 야권연대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반격의 시작일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선거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것인지 아니면 야권연대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를 갈림길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끊임없이 야권연대로 몰아갈 것이다. 이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운동은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펼쳐감으로써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본질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업 결의가 간부들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고 관료적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미 미국의 점령운동은 룡뷰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항만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공동의 투쟁으로 항만을 봉쇄하기까지 했었다. 이에 맞서 기성 노동조합 관료들은 자본가들의 앞잡이가 되어 파업을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국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료들은 미국식 노동조합의 길로 들어선지 오래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통제하고 판에 박힌 투쟁만을 전개한지 오래 되어 버렸다.

이러한 투쟁방식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2년 정세는 지난해 희망버스의 압력을 상회하는 점령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의 활력이 노동조합 운동에 공급됨으로써 낡은 지도력을 대체해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공식 노동조합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선동해 나가야 한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자본가 야당에 돌아가지 않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성장으로 축적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현 시기에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운동에서 드러나는 모든 투쟁이 자본가계급의 입장과 노동자 계급의 입장 사이의 정치적 투쟁이다. 정리하고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문제는 결코 다른 계급에 의지해서 풀릴 수 없다. **역명**

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최병승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주)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파견법 6조 3항(고용의제)를 적용하여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라 밝혔다. 즉, 현대자동차(주)는 파견법 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5항을 위반했으며, 동법 제4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로 현장 분위기는 높아만 가고 있다.



[편집자]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뒤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 지난 2월 23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최병승 동지가 <혁명>에 기고 글을 보내왔다. 이번 대법 판결 이후 현장의 분위기와 당면한 대응 방향에 대해 궁금해 할 많은 독자들을 위해 현재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급히 시간을 내서 썼다고 한다. 이번 대법 판결 이전의 글이지만 <혁명> 준비5호(1월)에 최동지가 기고한 “혼란의 증지부를 찢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글도 함께 읽어 보길 독자들에게 권한다.

1. 대법원 판결 핵심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불법이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1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사용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측은 2월 29일 울산공장장 담화문에서 “금번 23일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 신규채용으로 현장을 흔들고, 정리해고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사내하청 폐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 탄압에 맞서야 한다.

2. 일어서는 현장

8년 동안 지회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이 조합원에게 투쟁의 정당성과 확신을



을 갖게 만들었다. 8년 동안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3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故류기혁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으며, 2명(최남선, 황인화)의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했다. 또한 조합간부 20명 구속, 160여명 해고, 1,000여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에도 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사수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불씨를 지켜나갔다. 그 저력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현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다.

대법판결 일자가 확정된 후 19일부터 금속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지회 조합원 간담회’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업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대법판결 보고대회’, 2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개최된 수요 집회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다.

2월 20일(월)	21일(화)	22일(수)	24일(금)	29일(수)
금속 간담회			자체보고 대회	지역집회
1공장 121명	2공장 45명	엔/변·시트 24명	1공장 195명(A조 95명, B조 100명) 2공장 200명(A조 100명, B조 100명) 4공장 83명((A조 26명, B조 87명)	150여명

25일 파업 이후 1년간 극심한 현장탄압과 해고자 출입 통제, 집행부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집행으로 조직체계가 무너져 있었지만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다시 현장은 투쟁의 지로 불타고 있다. 지회가 정상화 되고, 어느 시점에 오면 제2의 '25일 파업'이 시작될 것이다.

3. 투쟁에 돌입한 지회

현장이 살아나면서 지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현장 요구는 간부 활동가 결의로 이어졌고, 3월 6일부터 지회 4대 임원선거가 진행된다. 얼마나 많은 후보가 출마할지 모르지만 8대 요구를 걸고 투쟁했던 25일 파업의 기억을 가진 조합원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조합탈퇴자, 비조합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조직력을 확대하고, 각 사업부별 체계를 수립하고 선거 이후 즉각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주)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을 요구했고, 사과도 내용도 없는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지회 요구와 투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공동투쟁도 시작되고 있다. 3월 2일 현대차지부장과 비정규직지회 3지회장은 간담회를 갖고 3월 6일 원하청연대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공동투쟁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 활용론을 주장하며 3월 투쟁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와 지금부터 현장 조직화가 요구되는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간 입장을 좁히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즉각 시행할 사업

대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각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여론화를 시작으로 산하사업장 사내하청 제도 철폐 투쟁을 2012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소한 금속노조 사업장을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대응이 있어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대자동차로 국한되지 않고,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 그리고 전국 제조업 사업

장으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차지부는 대법판결에 따른 긴 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현대차노조 11대 집행부는 불법파견 투쟁을 시작하면서 노동부 판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투입 금지, 8개 항목에 대한 공정분리 금지를 노동조합 긴 급지침으로 발표했다. 대법원이 최종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보다 분명하게 불법적인 비정규직 투입 금지, 현재 일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보장, 공정분리 금지 등을 밝히고, 불법파견 현장을 보전하고 정규직화 대상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가 현장조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전주를 제외하고는 아산과 울산은 지회장 선거를 마무리해야한다.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가 정상 체계를 갖추게 되면 공동 요구(8대 요구)를 재확인하고, 현장조직력 확대(집단 조직화 등)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집중시키기 위해 교섭을 빠르게 배치해야 한다.

교섭을 일찍 하나 늦게 하나 사측의 반응은 동일하다. 즉, 일찍 하면 할수록 사측을 향한 조합원 분노를 빨리 모으면서, 집단조직화

로 지회 조직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섭이 계속 미뤄진다면 사측이 신규채용과 정리해고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지회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조직체계 정비와 동시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하는 8대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재개하고, 조직 확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역명**



혁명 창간준비 6호

반에 이미 2천만대 이상 자동차 과잉설비가 갖춰졌고, 2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과잉생산 됐다. 모든 주요 자동차회사들이 어떻게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장 설비를 갖춰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불변자본(또는 '고정자본') 양이 자동차산업의 노동인력(가변자본)에 비해 그 불비가 매우 높았다는 의미이다.

이미 1990년대에 자본가들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처한다면서 생산성 제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인력 감축 등을 가차 없이 밀어붙였다. 모듈화 아웃소싱, 부품사 통폐합 및 전문 대형화를 통한 독점화, 완성차 독점 자본들에 의한 부품사 단가 후려치기 등도 이 시기 자본가들이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자동차산업 과잉생산 · 과잉축적 위기가 투기호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무엇보다도 투기호황과



과잉생산 위기

이로 인해 고임금 노동자들 및 중간계급 소비자들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기름값이 낮은 수준으로 이 시기에 묶여 있던 요인도 한 몫 했다. 게다가 거대 자동차 회사들은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과 가격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시장 확보를 위해 날로 격화되는 경쟁 압박이 끊임없이 노동자 착취 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 시장 가격 경쟁이 파멸적인 제 살 깎아먹기 수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발생한 자본 위기를 온통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 누적된 모순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

세계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산능력	7,997만대	8,000만대	8,125만대	8,400만대	8,600만대
생산대수	5,700만대	6,022만대	6,191만대	6,518만대	6,751만대
판매량	5,644만대	5,700만대	5,863만대	6,012만대	6,192만대
능력대비 판매량 차이	2,353만대	2,300만대	2,263만대	2,388만대	2,408만대
생산량 대비 판매량 차이	166만대	322만대	328만대	506만대	659만대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 재구성

어떤 식으로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커녕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설사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급속히 팽창하는 신규 시장을 발견 —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거대 인구 국가에서 — 할 수 있을 지라도 이것은 더욱 격렬해질 제2라운드 경쟁을 동반하여 이미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 생태적 도박을 가열시킬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 밖에 있는 나라들에서 더욱 더 많은 ‘중산층’들을 자동차 소유자로 전환시켜내는 것이 이들 나라의 빈곤과 취약한 운송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자동차산업의 위기(그리고 여타 운송수단 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생태친화적 운송시스템에 대한 필요를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은 둘째치고) 접근조차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산과 산업에 대한 자본가적, 사적 소유와 통제가 생산수단의 발전에,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절대적인 족쇄이다. 정말이지 자본주의를

그대로 놓아 둔 채 그 틀 안에서 ‘해결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생산수단과 사회의 생산력을 파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통폐합, 독점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하여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눌러놓고 쓸모없는 잉여역량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최대 생산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산업의 국유화와 함께 산업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와 계획(planning ; 생산 및 산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수백만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국제적 생산사슬(국제 체인망)을 틀어쥐고 생산 전체를 재조직하기 위한 산업 통제와 계획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족쇄를 끊어낸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숙련과 전문성은 실로 엄청난 자산이다. 그 사회적 잠재력이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헛되이 손상되고 낭비되고 있다.



현대 비정규직 25일간의 투쟁

시리아 혁명과 아랍의 봄

양재훈



시리아 이德利브 지역의 시위

시리아에서 바사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권의 강경 탄압으로 7천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그러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 움직임도 분주

해지고 있다. 한편 시리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아사드 정권을 동맹군으로 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또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서방의 개입에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2011년 초에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굴절된 리비아 혁명에 이어 시리아에서도 순탄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튀니지, 이집트 혁명이 중동 전역으로, 아랍 혁명으로 확산되고, 독재 정권들

혁명 창간준비 6호

시리아 국가위원회의 경쟁자는 전국조정위원회(NCC)이다. 시리아 내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연합세력이다. 후세인 압둘 아잠이 이끌고 있고 국가위원회보다는 더 왼쪽에 있는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권이 학살을 멈추고 시위를 허용한다면 정권과의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외부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명백히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세력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지도부가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친자본주의적, 친(서방)제국주의적, 친터키적 또는 친사우디적, 또는 이슬람주의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혁명가들이 그 운동에 대한 지지 또는 아사드 정권의 혁명적 타도에 대한 지지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혁명가들은 그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에 맞선 그 투쟁 내에서 혁명가들은 또한 반동적 또는 친제국주의적 지도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들과는 별개로 자유시리아군대(FSA)가 있는데 수천명의 군 탈주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유시리아군대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이고 서로 다른 무장집단들이 하나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전사들은 봉기의 거점 도시들에서의 시위를 보호해 왔고, 정권의 보안군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몇 차례 감행해 왔다. 비록 그 지도부는 터키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국가위원회나 전국조정위원회 그 어느 것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중들의 통제 하에 있지도 않다.



2월11일 아딜리브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맹세하는 시위대

지역 수준에서는 진보적 사태발전을 담보할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그룹들과 단체들이 있다.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아래로부터, 기층의 투사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처음부터 이들 청년 시위자들은 급속히 소규모 지역위원회들을 조직하여 봉기를 외부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시리아혁명총평의회

그리스 혁명과 전 유럽 노동자혁명

홍수전

지난 2월 13일 그리스 의회에서 잔인한 긴축안이 통과되자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서 격렬한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수도 아테네에 서만 시위대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2008



년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 통과된 긴축안이 공공부문 노동자 1만5천명 정리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20% 삭감 등 자본의 위기를 철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어서 이에 대한 항의투쟁도 그만큼 격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미 실업률도 21%에 이르렀는데 그 중 절반은 청년 실업이었다. 게다가

몇 주 뒤에 유럽연합(EU) 각료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훨씬 더 가혹한 긴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리스 사회는 지금 압력이 팽팽해져 터지기 직전의 상태이다. 그래서 투쟁의 규모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전투성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긴축안에 대해서는 그



고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를 장악하여 바뀌어나가겠다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지금 같은 준혁명적 시기에 파시즘의 대두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꼴이다. 그리스 혁명은 이외는 완전히 다른 전략과 지도부가 필요하다.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정당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도부의 의회주의와 개량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많은 평당원들이 있고, 이들 외에 전투적 현장활동가들, 신타그마광장 점거를 주도한 청년층들이 있어 이들 모두를 권력 장악 전략으로 규합할 혁명당이 빠르게 건설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탈퇴냐 고수냐? - 허구적인 딜레마

혁명전위당의 부재로 인해 그리스 인민은 지금 잘못된 딜레마에 갇혀 있다. 유럽연합 탈퇴냐 아니면 유럽연합 고수냐 하는 두 가

지 자본주의적 '대안'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전혀 대안이 아니다. 유럽연합 고수는 위와 같은 긴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위기 전기를 통해 그리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긴축으로 인해 공황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 파

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공산당과 몇몇 소규모 좌파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유럽연합 탈퇴는 어떠한가? 그것은 유로화를 포기하고 원래의 그리스 통화인 드라크마화를 다시 채택하는 '독립적인 자본주의 그리스'로 복귀하는 길이다. 이 독립 자본주의의 그리스는 유럽연합 내 다른 자본가 국가들과의 경쟁 압박 속에서 더 혹독한 긴축과 재정감축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는 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계급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리스일 것이다. 유로화에서 이탈하는 데서 오는 초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대폭 하락, 그리고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금융자본가 집단과 유럽연합 지배계급들에 의한 그리스 경제의 포위 봉쇄에 대해 독립적인 자본주의의 그리스는 경제파탄의 고통을 온통 노동자 민중들에게

리스공산당을 혁명적 전위세력인 것처럼 추켜세우며 유럽연합 탈퇴를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살리기를 전제로 하는 이가짜 대안을 마치 혁명적 대안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그리스 탈퇴가 곧 유럽 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유럽연합 탈퇴는 ‘일국적으로 고립된 국가 및 그 민족국가 통화체제로의 복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변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어서 “[유럽연합 탈퇴를 통해]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유럽자본주의 착취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낸다면 이것이 남유럽과 유럽 전역의 연쇄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노정협, 노동자정치신문 83호, ‘2012년 격화일로로의 유럽 정세’)



2월 13일 시위모습

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그리스에서 변혁”이나 “착취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일국 혁명은 유럽연합 탈퇴나 고수나라는 허구적인 딜레마를 내던져버리고 오직 전체 유럽 노동자계급의 전 유럽적 혁명전략을 추진하는 데서만 성공할 수 있다. 유럽연합 탈퇴를 통한 독립적인 자본주의 그리스가 아니라 사회주의유럽합중국²⁾이라는 목표 속에서만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일국 혁명이 국제 반동에 의해 와해되지 않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연대 속에서 혁명의 연쇄적 확산을 위한 강고한 혁명 기지로 복무할 수 있다. **혁명**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탈퇴는 ‘변혁’과 아무 관계가 없다. 또한 “착취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일국 혁명 및 혁명의 확산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유럽 노동자계급을 각 민족국가 지배계급의 노리개감으로 전락시키는 길을 닦는 것이고, 그리스에서는 유럽연합 고수 못지않게 노동의 생지옥

2) 위 노정협 인용글은 레닌이 유럽합중국 슬로건을 비판한 사실을 들어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구호”가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을 대립시키는 오도된 국제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 당시 ‘유럽합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 유럽합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군주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합중국’ 슬로건이 일국의 부르주아 혁명 과제를 건너뛰고서 전체 유럽에 공화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연합 내 어느 일국에서 전 유럽적 혁명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일국적으로 특수한 혁명 과제가 남아 있는가?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을 대립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노선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일국 사회주의’ 노선이다.

[기고]
나꼼수 현상을 통해 바라 본
한국사회¹⁾

아방가르드



요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꼼수의 비키니 시위와 그로 인한 논란은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 여성삼국(인터넷 커뮤니티 여초카페: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화장발)은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홀연히 자신의 길을 갔고, 정봉주는 사과 하였다. 그런데도, 이 논쟁은 SNS를 통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삼국은 성명서 발표 이후 전혀 대응이 없는 반면에, 나꼼수 매니아들은 여성삼국의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여성삼국에 대한 살생부를 올리고 여성삼국을 비난하는 트위터 맨션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는 마치 중세식 마녀사냥을 연상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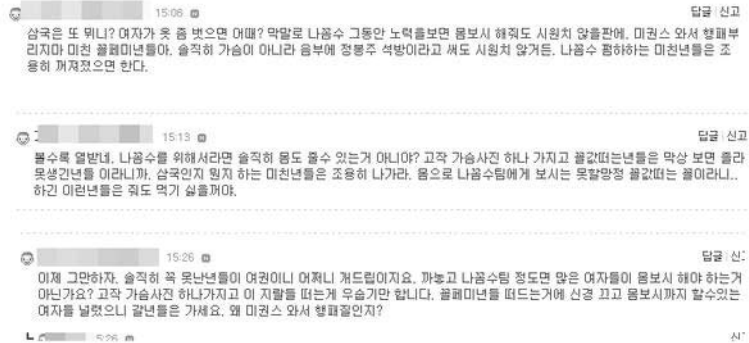
1) 정세월간지 <혁명>에 게재될 목적으로 쓰여진 본 기고글은 <혁명>지의 발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자에 의해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여성삼국에 대한 비난여론을 보면 마치 개그콘서트 두분토론 남하당의 목소리를 연상케 한다.

"여자들이 나꼼수 방송을 듣는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집안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 나꼼수를 듣고 웃고 떠들고 있어. 남자들이 비키니 시위 보고 코피조심 하라고 농담할 수도 있지. 뭐? 성명서? 나때 여자가 성명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서방이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하면 그때서야 울면서 이혼서류에 성명 쓰고 도장 찍고 그랬어. 여자가 정치한다고 할 거 다하고 돌아다니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한편의 코미디 같은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서 웃기지만,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씁쓸함을 지울 길 없다.

문제의 본질은 비키니 시위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알몸시위 등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도하는 것이며 이 논쟁과 관련이 없다.

비키니 시위 여성을 보고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자유이고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



니다. 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방송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보는 여성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치욕을 느끼게 한다. 특히, 입에 담지 못할 음란성 댓글들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었기에 엄연히 성희롱이다.

<미권스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비난 댓글들 중 일부 캡처 사진, 클릭하면 크게 보인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댓글이 일부가 아니라 더 심한 욕도 다반사이며, 이러한 비난이 비밀비재 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성희롱 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다른 어떠한 문제도 이것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반박해 보기로 하자.

1. (여성삼국은) 장자연 사건에는 왜 침묵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치어리더로 생각하는 발언이다. 장자연 문제는 연예계 매니지먼트 스폰서를 통해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그들이 재벌 등(언론재벌 포함, 조중동!) 지배계급의 노리개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연예계 전반 그리고,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희생당한 여성은 장자연만이 아니다. 장자연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성이 성명서를 내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이 문제를 폭로하고 분개해야만 한다. 여성이기에 여성만의 문제를 다루라는 시각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이며 여성비하적이다.

2.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논리는 강자가 약자에게 주로 써 먹던 논리이다. 이 발언은 해석에 따라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는 (경제적인 위기와 상관없이) 계속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정리해고를 통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시켰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

았다. 이것은 모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결과이다. 나꼼수가 반MB정서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MB 정서는 나꼼수가 만든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부단히 싸워왔던 민중들과 이 명박 정권의 실정이 만든 것이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요즘의 여성과 남성은 무척이나 달라졌다. 얼마 전, 사법고시 시험에도 남성보다 여성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졌다. 이는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을 압도할 수 있으며 남녀의 능력이 평등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한미 FTA 지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여성이며, 한 대련 의장도 여성이며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희망버스의 히로인 309일 동안 목숨을 건 고공 크레인 투쟁을 진행했던 소금꽃 김진숙 동지도 여성이다. (투쟁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착취당하고 차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의식은 변화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전 인류에 걸쳐 남성중심의 역사는 모계 중심사회의 역사보다도 훨씬 짧다. 이러한 남녀를 차별하는 것

은 자본주의 생산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노동력을 더욱 착취하기 위함이다. 이번 비키니 시위를 통해 드러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성희롱 댓글들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대를 위해 소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짬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녀평등은 아직도 멀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녀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야 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확인한 셈이다.

3. 나꼼수를 비판하는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언제는 조중동이 옳은 소리를 한 적이 있던가? 이는 비단 나꼼수만의 일이 아니다. 조중동의 왜곡행위는 모든 사람들. 매체가 통상적으로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비키니 시위 자체가 원래 사회적인 관심을 폭발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봉주 의원은 현재



성욕 감퇴제를 복용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수영복 사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란거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나꼼수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일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꼼수팀에게 있는 것이지 여성삼국의 비판과는 하등의 상관없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조중동 알바로 몰고 조중동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회피이며 논란을 피하려는 아전인수식 프레임이다.

4.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논리는 오랫동안, 운동권(진보?)을 지배해오던 잘못된 논리였다. 이 논리는 타 정파의 논리를 묵살하기 위해서, 혹은 내부의 민주적인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논리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진보는 통합된 적이 결코 없다. 오히려, 다양한 정파와 분파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상호 발전되어 왔다. 사물의 변화, 발전법칙도 마찬가지이다. 분열과 갈등과 운동을 통해서 발전된다. 나꼼수 또한 그러한 단계에 봉착한 것이다. 나꼼수 또한 스스로 자정작용을 거치고 스스로 발전하는 과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꼼수는 망하지 않는다. 진보 또한 분열한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 그리

고, 나꼼수를 비판하는 것은 아군에게 충질을 하고 분열을 획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충구를 겨냥하기 위함이다.

나꼼수 매니아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거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댓글을 달고 도망친다. 어떠한 비판도 통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중증이다. 나꼼수가 도대체 무엇 이길래, 이들을 이렇게 중독 시켰단 말인가? 나꼼수가 사실상 새로 무엇을 하거나 새로운 무엇을 만든 것은 없다. 다만, 이미 확산 되어있는 반MB정서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약간 구체화 시켰을 뿐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일시 현상을 일으키고 동질감을 준 것이다. 나꼼수를 통해 사람들은 어느새 동지적인 연대의식까지 느끼면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꼼수 개개인들의 불확실한 주관적인 추측이, 청취자들에게는 이제는 위대한 예언으로 들려온다.) 이제는 종교의 교리나 교시가 되어 버렸다.

이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각종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 학력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리해고로 사람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재개발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부자들은 감세 및 각종혜택으



로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슈퍼맨(메시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절망을 버티기 어렵기에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이다. 그러나, 나꼼수는 결코 당신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나꼼수 5만의 애청자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나꼼수 공연을 보고 즐기다 돌아갔다. 적어도 그들이 시위현장인 여의도에 모였던 만큼 조금이라도 투쟁할 줄 알았다. 광우병 시위때 아프리카 TV를 보고 경찰의 폭력에 흥분한 사람들은 시위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즉자적이면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나꼼수를 보러 나온 군중들은 MB와 새누리당의 비리에 분노하면서도 투쟁하지 않았다. 그들은 왜 투쟁하지 않고 공연만 즐기다 가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용어 그대로 나꼼수의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기도 전에 가끔씩 투표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하는 나꼼수는 반

MB의 귀결을 총선의 테두리 속에만 묶어두고 자 한다. 한나라당 돈 봉투를 말하면서도 민주당 돈봉투 에는 눈을 감는다. 나꼼수는 봉주2회에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특집을 방송하면서도 현재 가장 절실한 3대 사회적 의제인.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꼼수에서 부각시키는 친노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 사실은 구 민주당보다도 훨씬 신자유주의로 우클릭된 사람들이다. 나꼼수에서 그들이 가끔씩 성대모사로 부각시키는 문재인은 현재의 FTA 반대논리가 과장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한명숙은 FTA 강불파(강건너 불구경파)이기도 하지만, 지난 노무현 정권때 FTA 저지 시위를 탄압하던 사람중의 한 사람 이었다. 한명숙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면서 석파울제를 협의하였다.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트위터에 들끓고 있음에도 나꼼수는 이것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한다.

FTA저지 투쟁을 하다가 한나라당의 등원요청에 과감히 등원해버리는 민주통합당. 때론 싸우기도 하지만 아쉬울 땐 서로 협조하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체제를 수호하는 자본가 계급의 양날개이다. 나꼼수는 새누리당과 MB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춘다.

한미 FTA저지만 해도 그렇다. 야권연대는 한미 FTA를 무조건 총선 이후로 미루었다. 총선이 끝나면 한미FTA 문제는 아마도 대선 이후로 또 연기될 것이다. 대선에서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FTA문제는 몇 가지 절충 되거나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는 비단 FTA 문제뿐만이 아니다.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및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야권연대는 복지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들지만, 자본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어 총선이 지나가면 자본가 계급은 다시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의 사회적 의제가 결여되어 있는 총선은 기만이다. 또한, 3대 사회적 의제가 결여되어 있는 나꼼수 또한 기만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시작되었던 희망 텐트에서조차도 안타깝지만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쌍용만이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죽음이 얼마나 어디에서 이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다. 한때나마 노동자 계급의 희망이었던 구 민노당과 진보신당 일부조차도 3자통합으로 자본가 정당과 결합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스스로 진보이길 포기했다. 도대체 믿을만한 정치인과 정당이 없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바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사회와 정치는 더 이상 기망이 없다. 혁명이 아니면 그 해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나꼼수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나꼼수가 반MB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나꼼수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과 지난 4년간 민중들이 거리에서 부단히 싸워가며 이루어고자 했던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 나꼼수가 부각시키는 개혁 가능성 없는 정치인과 정권교체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고 이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스스로 투쟁하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총선이고 뭐고 한미 FTA 문제는 끝이다. 더 이상 기망없는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연대에 기대지 말고, 민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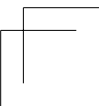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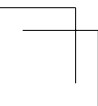
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서 막아야만 한다. 희망텐트 (3차 희망버스에서 경찰 차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공권력과의 충돌이 있었기에, 희망버스와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촉발된 것이다.) 또한, 보다 공격적인 투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폭발시키고, 그 투쟁이 더욱 확산되어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나가야만 한다. 총선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그 한계속에 갇히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보다 투쟁에 매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한계와 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우리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차마 넘지 못했던 명박산성을 이제는 넘어야만 한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 내부의 모든 기회주의를 일소하고 이제는 반드시 경찰차벽과 공장차벽을 넘어 서야만 한다. 어제 통진당이 주최하는 한미 FTA 저지 집회에서 지루한 연설이 끝나자, 범국본은 또다시 광우병대책위와 마찬가지로 분출하는 시민들의 투쟁의지를 제한하고 만류하여 시민들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희망텐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진입을 시도하려는 노동자들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료상층부는 만류하였다. 왜? 다가오는 총선이 있기에? 지금도 아니 그전에도 투쟁하지 않고 자신들의 출세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정치인들에게 무슨 희망을 건단 말인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들 밖에 없다. 우리가 투쟁

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타협하는 세상
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쟁취하고 건설하
기 위함이다. **역명**



나꼼수나꼼수 ♪
민주통합당(친노세력)의 깔때기 ♪
코피말고 그 입을 조심하라!!



혁명

창간준비
1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왜 지금 혁명당 건설을 말하는가? - 고민택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 양효식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 남궁원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 이형로

주간연속2교대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선을 확대하자! - 구재보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 - 김명석

〈그리스〉 준혁명적 상황,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 김병호

[기고] 장기투쟁사업장 : 이제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 강종숙

[기고] 복수노조 시대 : 민주노총은 기득권 유지에 안주할 것인가? - 정현철

[자료] 사노련 항소심 모두진술문 - 오세철

혁명

창간준비
2호

목차

창간준비 2호를 내며

[희망버스] 자본주의 체제의 변호론이 된 진보 담론들 - 임천용

[820 희망시국대회]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민주대연합 제단에 바치다! - 김명석

[한진 중공업 해고자 인터뷰] 한진노동자, 청문회를 넘어 계속 전진!!
- 이용대 / 김병호

더블딕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위기! - 이민수

[유성지회 투쟁] 왜 패배했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가? - 구재보

왜 사회주의자들은 리비아혁명을 지지해야 하는가? - 양재훈

리비아혁명 제1단계의 승리 : 혁명 전진을 위한 당면 과제들 - 양재훈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 좌클릭? - 남궁원

[영국 폭동] 야만스러운 것은 폭동이 아니라 바로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 김병호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기고]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기고] 노동조합투쟁과 ‘사회주의자’ 조직 - 김태훈

[독자비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발걸음에 든든한 깃발이 되길

혁명

창간준비
3호

목차

창간준비 3호를 내며

희망버스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명석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 양효식

사회주의 전면화만이 민주대연합을 잠재울 수 있다 - 고민택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임천용

광노현 사태와 부르주아 도덕 - 김병효

유성 조합원 인터뷰 - 엄기준, 엄선주 / 구재보

사노위 4차 총회 - 혁명정치를 폐기하고 조직을 유지하다 - 이성호

《혁명》, 작지만 명확한 원칙과 넓은 전망으로 출발하다 - 이형로

[트리폴리에서 보내온 글] 이것은 철저한 민중혁명이다 - 번역 / 양재훈

[연재 2] 계급의식과 파시즘의 계급무의식의 대립구조 - 오세철

[토론회 발제문] 현 위기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 양효식

[자료] 사노련 항소심 결심공판, 오세철 교수 최후진술문

혁명

창간준비
4호

목차

- 〈혁명〉 창간준비 4호를 내며
- 당 건설 투쟁의 기초를 밝힌다 - 고민택
- [출범 축시] 혁명은 온다 - 임성용 시인
- 혁명강령으로 출발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이형로
-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2라운드 - 이민수
- 3자통합,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최종적 파산 - 임천용
-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야권연대 - 이종범
-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남궁 원
- 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 구재보
- 희망버스운동 : 평가와 과제 - 김명석
-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 박현제
- [간담회 후기] 현자 비지회 집회 신고투쟁 - 김병호
- 반혁명인가 계속혁명인가의 갈림길에 선 이집트 - 김병호
- [인터뷰] 재능지부투쟁 1500일을 앞둔 유명자 지부장
- [연재 3] 소련에서의 계급의식과 붉은 파시즘 - 오세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 회원들이 말한다 - 이지윤, 김남명, 정현철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을 맞아 동지들이 보내온 메시지

혁명

창간준비
5호

목차

〈혁명〉 창간준비 5호를 내며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원칙과 방향 - 양효식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 임천용

김정일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 고민택

유럽 위기와 전 유럽 노동자혁명 전략 - 양효식

한국판 ‘점령하라’ 운동, 쌍용차 희망텐트촌 건설을 위하여 - 김명석

[현자 비정규직]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 최병승

[재능 거리특강] 0.5평 비닐 텐트 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 황지수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 김병효

[연재 4] 계급의식 중국에서의 마오주의의 환상과 적색테러 - 오세철

혁명의 광고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우리은행 1002-735-860549 (오세철)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jinbo.net/wrp>

혁명

창간준비
6호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발행하는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노동자계급 해방투쟁 승리의 전망을 밝히는 살아 있는 정치선동의 무기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공급하고 계급투쟁의 당면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열린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글 '《혁명》 창간준비호를 내며' 중에서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